每日新聞 2006년 08월 29일 001면

미군기지 반환지역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첨단 61개 업종 공장 허용

공장총량제도 풀어

수도권에 위치한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경우 첨단공장 신설과 공장총량 규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계기사 2면

이와 함께 미군의 반환 공여지 매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9일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와 그 주변지역에 컴퓨터, 항공기, 광섬유·광학섬유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첨단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반환공여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미군이 기지를 이전하는 평택지역과 동일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500㎡ 이상 규모의 첨단 공장의 신설이 가능해지고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매년 배정하는 공장총량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주요 첨단업종은 약제품, 반도체 제조용기계, 산업용 로봇,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자동차용 엔진, 축전지,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조업 등이다. 연합뉴스